

안내

250415_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 기자회견 발언문 문서입니다.

각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 일시 : 4월 1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세월호 기억공간 (서울시의회 본관 앞)
- 공동주최 :
 - (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순서 :
 - 사회 : 4.16연대 김선우 사무처장
 - 김종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
 -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TF 변호사
 - 정니콜 4.16해외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굳게 닫힌 박근혜 7시간을 시민의 힘으로 개봉하는 자물쇠 오픈 퍼포먼스.

앨범

<https://photos.app.goo.gl/ikipjqqcrrZaSuVA8>

기자회견 직후 업로드됩니다.

김종기 (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박근혜 7시간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단원고 2-1반 수진아빠 김종기입니다.

지난 11년이 흐르는 물처럼, 활을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화인처럼 세월호 참사가 가슴에 박혀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이기에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단 한 명도 구조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야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304명 국민의 죽음을 성역 없이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상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고 시민여러분과 함께 11년을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참사를 책임져야 할 국가는 이러한 우리 가족들과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고 사찰하는 등 해서는 안 될 국가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조사기구의 예산과 인력을 축소하고, 조사를 방해하고,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등 다양한 행태로 실행되었고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기록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30년 동안 볼 수 없게 봉인시켰버렸습니다.

바로 진상규명에 대한 심각한 방해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5시 15분 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서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참사의 콘트롤타워인 대통령으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침 8시 52분 119에 최초 침몰 신고가 있고 나서 8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서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참사의 상황인지가 전혀 안 되어있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시민들은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인 시간을 알고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알고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참사당시 국민 304명이 세월호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죽어갈 때 콘트롤타워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하고 제대로 그 책무를 다 했는지를 알고싶은 것입니다.

그나마 얼마전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박근혜 7시간 기록물 지정이 위헌적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1년 만에야 당시 7시간의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 덕분입니다.

시민여러분, 세월호 참사 11주기 앞둔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다 되지 않았고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지휘책임자들 또한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한 세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되는 참사들로 또다시 국민이 억울한 희생자가 되고 유가족이 되는 것을 보면서 11년이라는 긴시간이 지났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세상을 위해 우리 가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

2014년 4월 16일 아침 9시 박근혜 씨는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행적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하고 있었을까요? 보고를 받았을까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무엇을 어떻게 지시를 했을까요? 우리는 국민에게 공직자로서 모든 자료를 공개할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진상규명의 첫걸음은 정보공개입니다.

박근혜씨가 무슨 지시를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감췄습니다.

그러나 30년 시간으로 비밀로 감췄습니다.

무엇이 두려웠기에 30년이라는 시간동안 못보게했을까요

우리는 궁금합니다.

박근혜씨는 보고를 받았을까

해경은 박근혜씨에게 보고를 했을까.

해경청장은 박근혜씨에게 무엇을 지시받았을까.

해경청장은 왜 구조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통제실에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씨는 지시하지 않았고,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무책임한 사회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재난참사가 일어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진상규명의 첫걸음은 박근혜씨가 그날아침 무엇을 했는지부터 공개하는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 침몰했는지부터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까지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부를 알지 못하고 무죄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다시는 반복해선 안됩니다.

한덕수가 똑같이 비밀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진상규명의 첫걸음은 정보공개부터, 감추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우리는 박근혜씨의 잘못을, 윤석열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시민이 세금을 내고, 국가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살살이 밝히길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이 아니라, 오늘 한덕수가 또다시 비밀을 감추지 않게 하기 위해 각성을 촉구하는 바.

박근혜의 비밀만큼 윤석열의 음모를 밝혀내는 일에 힘모아주십시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입니다.

내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꼭 오늘처럼 화창한 봄 이었습니다. 11년 전 오늘 우리는 304명의 생명들이 구조의 손길 없이 차가운 맹골수도에서 가라 앓는 것을 목도하며 ‘이것이 국가인가’,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절규하며 오열했습니다. 이날 재난은 그저 배가 바다에 가라 앓는 현상을 가르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부터 11년 동안 봄의 찬란함은 비통함이었습니다. 매년 봄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 11년 간 세월호 참사에서 실종되었던 국가를 찾아내기 위해 안간 힘을 썼습니다. 국회, 세월호 특조위, 사참위, 수사기관들, 언론, 시민사회 모두 그날의 흩어진 진실을 맞추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긴 시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이 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부터 중대본을 방문한 오후 오후 5시경 까지 박근혜의 행적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은 충분치 못한 증거, 주변 정황과 증언으로 잠정적인 결론이 내려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결론은 ‘국가의 부재’입니다. 이유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재난 대응을 위한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겨짚어져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기관입니다.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무엇을 했으며 국가는 왜 부재 했는가.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것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국가는, 대통령은 국민이 위험에 처한 재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대통령의 책임은 얼마나 무거운가.

세월호 참사가 아직 완전한 진상규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7시간 행적에 대한 기록물들이 대통령지정기록으로 봉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박근혜가 파면되며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이 2014년 4월 16일 생산한 문서와 접수한 문서들 그리고 그 문서들의 목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30년간 봉인하였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안보, 경제, 정치적으로 극히 민감한 정보들로 공개될 경우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해당 대통령의 정치적인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들로 제한되어야만 합니다. 수백 명 국민이 생명을 잃은 재난에서 국가의 책임,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7시간 행적에 관한 기록을 봉인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국가의 책임과 대통령 책임을 면피를 위한 정보은폐 제도로 악용하였습니다.

암담한 상황 중에 지난 1월 9일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님이 진행한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은 참사 당시 위 대통령 직속기관들의 문서 목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법원의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박근혜 7시간과 관련된 기록들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 정보가 아니거나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정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취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상규명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진전입니다.

416 연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 기록에 대해 지금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우리는 위 판결을 딛고 진상규명을 향해 또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태원 참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416 연대와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모두 공개되어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때까지 진실에 대한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한 진상규명 만이 우리 사회가 긴 이별을, 애도를 온전하게 마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국회에는 권한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을 제한하고 탄핵사유와 관련 있는 기록, 탄핵된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과 관련 있는 기록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에서 제외하는 「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통해 박근혜 세월호 7시간 기록이 은폐된 것처럼 12. 3 비상계엄 관련 기록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봉인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입니다. 이 개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TF

정보공개법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생산한 기록은 모두 공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부분에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경제안정은 저해하고 국민의 신체안전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을 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법 적용 해보면, 이 사건, 박근혜 행적 7시간, 세월호참사가 왜일어났는지 그 핵심비밀이있는기록들은 첫째 사생활이 아닙니다. 둘째 감사업무에 차질을 주는 국가운영에 혼란을 주는 정보가 아닙니다. 기록물법을 들여다보더라도 중대위험을 초래하는 정보가 아니라, 공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국가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있습니다
공개하지않는것이 국민안전에 혼란을 초래하는 정보임.

개인의 신체 명예 침해 발생하는 정보가 아니고,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사이후 지금까지도

개인의 신체재산명예 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법과 대통령기록물법 17조에 의거해서, 이 사건 정보를 박근혜7시간을 포함한 세월호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핵심 청와대정보들을 공개해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 현행법의 취지라고 어떤 법률가도 해석하지않을수 없음.

그래서 우리국민들은 다시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이 자료들을 다 받아낼것이고 받아낼 수 있습니다.

주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또해야할텐데,

이 정보 다시주지 않는 행위는 다시설명드리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다시말씀드립니다. 국가책임을 방기함으로서 국민의 신체에 위험을 실제로 하는 행위임.

진실로접근하는 마지막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정보들을 이번봄에는 반드시 받아내야겠습니다.

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TF

정보공개법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생산한 기록은 모두 공개하기로 되어있음.

극히 예외적인 부분에서만 제한하고있음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경제안정은 저해하고 국민의 신체안전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을 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법 적용 해보면, 이 사건, 박근혜 행적 7시간, 세월호참사가 왜일어났는지 그 핵심비밀이있는기록물은 첫째 사생활이 아닙니다. 둘째 감사업무에 차질을 주는 국가운영에 혼란을 주는 정보가 아닙니다. 기록물법을 들여다보더라도 중대위험을 초래하는 정보가 아니라, 공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국가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있습니다

공개하지않는것이 국민안전에 혼란을 초래하는 정보임.

개인의 신체 명예 침해 발생하는 정보가 아니고,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사이후 지금까지도

개인의 신체재산명예 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법과 대통령기록물법 17조에 의거해서, 이 사건 정보를 박근혜7시간을 포함한 세월호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핵심 청와대정보들을 공개해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 현행법의 취지라고 어떤 법률가도 해석하지않을수 없음.

그래서 우리국민들은 다시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이 자료들을 다 받아낼것이고 받아낼 수 있습니다. 주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또해야할텐데,

이 정보 다시주지 않는 행위는 다시설명드리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다시말씀드립니다. 국가책임을 방기함으로서 국민의 신체에 위험을 실제로 하는 행위임.

진실로접근하는 마지막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정보들을 이번봄에는 반드시 받아내야겠습니다.

정니콜 4.16해외연대

"세월호참사 대통령 기록물 및 비공개 정부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

4.16해외연대 정니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1년이 지났지만,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가려져 있고,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에게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특히 세월호 참사 대통령 기록물의 전면 공개를 요구합니다.

지난 1월 9일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공개 처분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공개 취지의 판결이 나온 지금,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장 30년까지 기록을 공개할 수 없도록 막아둔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을 봉인 해제할 기회입니다.

기회주의적 정치인들과 관성에 젖은 언론인들은 진실보다 이해관계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참위' 조사 결과조차 외면하는 권력에 맞서, 기록물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월호참사 대통령 기록물 및 비공개 정부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

4.16해외연대가 11주기를 맞아 목포항에 건 현수막에 쓴 구호입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대통령 기록물 등 모든 문서를 즉시 공개하라!
-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5년 4월 15일

4.16해외연대

오늘 우리의 외침이 '진실의 문'을 열기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1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세월호는 결코 '과거'가 아닌 '현재'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